

B-1·ESTA로 장비설치 가능… 韓·美 비자문제 급한 불 꺼

외교부, 비자 워킹그룹 협의

양국, 韓기업 안정적 대미투자 위해
원활한 인적교류 제도 인식 공유

美 ‘유사사태 재발금지’ 입장 확인
미국의 근본적 비자제도 바뀌어야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 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 1차 협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

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 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韓,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李 대통령, 77주년 국군의날 행사
“한미연합 방위태세 주도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임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



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평화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뛰어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굳

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은) 다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것으로, (회복은)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라고 설명했다. 회복이라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 75만명 업무자료 소실

국정자원 화재 ‘G드라이브’ 복구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업무자료를 모아놓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완전히 소실되면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 명의 공무원이 각자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5층 7-1 전산실에 있던 G드라이브 시스템이 소실되면서 858테라바이트(TB) 분량의 데이터와 별도 보관하던 백업 데이터도 모두 소실돼 공무원들의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7-1 전산실에 있던 G드라이브가 불에 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 등은 더 확인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G-드라이브는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개인업무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작업하며, 이때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 상 외부로 공유할 수 없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7년 공무원 전용 G드라이브를 구축해 외부에서도 업무용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 G드라이브가 이번 화재로 전소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자료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정보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훈 기자 ch9720@

정무위, 최태원·김범석 등 기업인들 국감 증인 채택

민주당, 증인 출석 최소화 당부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선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최소화해달란 입장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의장, 김병

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국정감사 때 최태원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국회로 부르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김범석 쿠팡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당 차원 청문회에서 예고한바 있는데, 그대로 실현됐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의혹으로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前 환경노동위원회)도 다수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불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따져 묻고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휴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정무위에 이어 한노위의 부름을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감시하지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인데, 이와 달리 기업인 감사에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자원 화재, 매뉴얼 없는 부주의가 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자원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화재로 인해 정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을 방문해 기관의 부주의와 준비 부족을 화재의 원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대표(사진)는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국자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행안위원들이 화재현장을 다녀갔지만, 오늘은 직접 왔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자원은 지난 9월26일 저녁에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우편, 정부24 등 행정·민원 서비스의 중단 및 불편이



초래된 바 있다.

장 대표는 “가만히 있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따라서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지켰는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작업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와서 보니 더 답답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을 지켰는지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결국 부주의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이 결국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